주민번호 단순 도용
30대 첫 사법처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반 행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 및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최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1일 김모(43)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 사은품을 받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1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챙기고 또 다른 32명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게임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2002년 8월께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란을 통해 타인의 주민번호 245개를 알아낸 뒤 지금까지 디스켓에 저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9월25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단순도용 혐의로는 전국 경찰서를 통틀어 처음 적발된 사례"라며 "단순도용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타인 주민번호를 단순 도용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전 주민등록법은 주민번호 도용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에만 처벌하고 단순 도용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연합뉴스

진념 전 부총리 아들
영국 기차역서 감전사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아들 진강(31)씨가 지난 22일 밤 영국 런던 근교 뉴몰든 기차역에서 선로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진씨는 이날 밤 10시10분께 런던행 상행선을 타려고 뉴몰든 기차역에서 기다리던 중 선로에 떨어져 전기가 통하는 레일에 감전돼 현장에서 사망했다. 진씨는 당시 함께 있던 동생 진율 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진씨가 실족해 선로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선로에 떨어진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진씨는 런던의 금융회사인 엘긴 캐피털의 펀드 매니저로 재직했다.

진 전 장관은 24일 대한항공편으로 런던에 도착할 예정이며, 아들의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마구잡이 내사' 많다

올 상반기 191건, 60%가 무혐의 처분
압수수색 영장 남발… 인권침해 우려도

광주지방검찰청이 본격 수사에 앞서 실시하는 내사 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가운데 10명 중 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검찰 내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또 광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도 최근 5년 사이 4.4배가 증가하는 등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서울 강동을)은 24일 광주 고·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광주지검의 올 상반기(1월~6월) 내사 처리 건수는 191건으로, 이 가운데 40.3%인 77건만 입건 처리되고 나머지 114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내사 사건에 따른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의 내사 사건 처리 건수는 ▲2003년 185건 ▲2004년 240건 ▲2005년 190건이며, 연도별 입건율은 ▲2003년 24% ▲2004년 32.1% ▲2005년 35.7% 등 대부분이 20~40%대에 그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광주시교육청 이모(53) 사무관을 대상으로 개인 비리 혐의와 광주시교육청 비자금 등에 대해 1개월여간에 걸쳐 내사를 벌였지만, 결국 최근에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 때문에 당시 교육계에서는 뚜렷한 물증도 확보하지 않은 채 교육기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공정성을 잃은 무리한 실적주의 수사 아니었느냐?'고 비판했었다.

같은 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광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지난해 2천73건으로 최근 5년 사이 무려 4.4배가 급증하는 등 계좌추적 영장청구가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01년 472건 ▲2002년 1천182건 ▲2003년 1천773건 ▲2004년 2천40건 ▲2005년 2천73건이었으며, 올 8월 말 현재 1천376건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검찰의 경우 연결계좌 추적을 통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범죄없는 내고장 만들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 갱생보호위원회'(회장 김영수)는 24일 오후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범죄없는 내고장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내사(內査)=아직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에 앞서 범죄 혐의의 유무를 조사하는 활동. 내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 시작된다.

▲수사(搜査)=범죄혐의가 인정될 때 시작되는 조사활동.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를 가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결정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계.

"전관예우 실컷 받고 '지역법관' 복귀해도 되나"

광주고법 국감 지적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한 판사들이 형사사건 수임을 싹쓸이하는가 하면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일반 변호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지역 법조계의 예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전주·제주지역에서 '판사→변호사→판사' 또는 '검사→변호사→판사'로 이동하며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해 구속·보석사건을 싹쓸이하고, 전관예우의 재미를 톡톡히 본 후 다시 근무했던 법원으로 복귀하는 '지역법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A판사는 전남에서 태어나 광주고법 관할지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광주에서 변호사로 개업, 3년 새 광주고법 관할지역 형사사건 242건을 대거 수임한 후 2004년 광주고법 산하 법원으로 복귀했다.

전북 출신인 B판사는 광주고검 관할지에서 근무하다 2000년 전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4년간 광주고법 관할지 형사사건 519건을 수임하고 2004년에 광주고법 관할 법원 판사로 유턴했다.

'전관 변호사'들의 경우 2003~2005년 구속적부심 사건 119건 중 57.1%가 석방돼 승소율이 광주지법 평균보다 9.7%포인트나 높았다.

또 광주지역 변호사 1인당 평균 보석사건 수임건수가 3.5건에 불과한데 반해 '전관 변호사'는 1인당 19.2건씩 수임, 그 차이가 6배에 달했다.

지난 2003~2006년 구속·보석사건 '수임 톱 10' 분석결과에서도 광주지법 구속사건의 '전관 변호사' 비율은 59%, 보석사건은 63%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역법관 제도=대법원은 지난 2004년부터 인사운용의 안정성·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의 '향토법관' 대신 희망 근무지를 우선 고려해 신규 예비판사 16명과 신규 판사 3명, 기존 법관(고법부장 이상 제외) 등 총 240명을 '지역법관'으로 선발했다. '지역법관'을 지원하는 경우 법관의 임기인 10년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

나우뉴스 〈6958〉 김종두

목포서 대낮 편의점 강도

24일 오전 10시50분께 목포시 하당동 H 편의점에서 30~40대로 보이는 스포츠형 머리의 남자가 흉기로 여 종업원(17)을 협박,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톱스타 'K군 몰카'는 합성

쌍나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톱스타 K군의 '몰카'(몰래 카메라)가 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K군으로 지목됐던 배우 권상우 측근은 "사진을 합성해 성인 사이트에 팔려 했던 범인이 자수의 뜻을 밝혔다"며 "오보를 한 일부 매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설명.

○…지난 23일 스포츠 서울의 보도로 화제가 됐던 'K군 몰카'는 '성행위가 담겨있다'는 설명과 함께 속옷만을 입은 남성의 사진이 함께 떠돌아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던 것.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